

##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819
----------	-----

발의년월일 : 2011. 4. 7

발 의 자 : 신 성 봉 의원외 9명

### 1. 주 문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감면하겠다는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 재정  
의 주된 수입인 취득세율의 인하는 지금도 울산 광역시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자원 마련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 하  
는 만큼 취득세율 감면에 반대함.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 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  
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  
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함.
-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으로,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현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  
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  
임.

-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율 감면이 시행될 경우 울산광역시 연 570여억원, 자치구,군 400여억원, 교육청57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중구는 64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득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임.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지방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음.
-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음.
-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나. 기 타 : 없음

### 4. 이 송 처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법 제 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중앙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인 부동산 취득세가 감소되어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 지방재정의 주수입인 취득세의 세율 감면이 시행될 경우, 중구에서는 64억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여서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책임과 재정부담만 증가시키며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우리 지방정부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세금이 많이 걸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4. 7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